미래통합당 초재선들, '김종인 비대위' 선호…이유는?

"누구보다 메시지 명징…지금으로서 최선"

중진들 반발 "스스로 정치적 금치산자 선언"

미래통합당이 4·15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선택한 데 대해 당 중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반면 초재선급 인사들은 '김종인 비대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실제 비대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초재선급 의원들이 당내의 든든한 원군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도로 21대 총선 당선인과 20대 국회 현역의원을 합친 142명(겹치는 인원 제외)의 의견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기 전당대회가 아닌 '김종인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당내 중진들은 잇따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를 밟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전날(22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를 겨냥해 "집 비우고 떠나는 사람이 '인테리어는 고치고 떠나겠다'고 우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찬성' 의견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종인 비대위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 내에서 유일하게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3선 의원이 된 조해진 당선인(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전권 비대위'를 두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당내 초선급 인사들은 대체로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달리 답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인사라고는 하지만 당의 체계에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 메시지가 명징한 분"이라며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진입한 한 당선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 인사들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김종인 비대위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상황은 향후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총선에서 5선이 된 정 의원과 조 최고위원은 당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당 대표로서 하마평에 오를 수 있는 인사다. 조해진 당선인 역시 당 지도부 혹은 원내지도부 입성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기한 없는 비대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당내 중진들의 입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의 현 상태를 두고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온 중진급 인사들로서는 당이 망가진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여러차례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중진들이 비대위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적나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맡겨달라는 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반면 신인들은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 9층에서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면서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오거돈 성추행' 국민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영범 기자

정세균, 기재부에 '뒷말' 경고…"재난지원금 혼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과 다른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석상에서 경고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리로서 이런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홍남기)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 지급을 내세웠다. 이후 홍 부총리 등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원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1일과 22일 홍 부총리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직접 봉합에 나섰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정 총리는 홍 부총리를 설득했다.

최이슬 기자

美전문가들 "김정은 건강 악화시 北 권력승계 조속히 이뤄질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실제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북한에서 조속한 권력 승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미국 맨스필드재단이 최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후계자 승계를 해왔다"며 "유사시에도 큰 혼란없이 권력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누지 대표는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당시 후계자로 세워진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결국 성공적인 3대 세습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면 이미 북한 당국은 유사시 대응 방안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무라노 마사시 연구원은 새로운 후계자가 누가 되더라도 북한의 대외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